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

외교통상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 길

2012년 6월 21일

AMNESTY
INTERNATIONAL



T: +82 (0)2 730 4755 F: +82 (0)2 738 4754
E: info@amnesty.or.kr W: www.amnesty.or.kr
Gwanghwamun P.O. Box 2045
Jongno-gu, Seoul, 110-620, Republic of Korea

외교통상부 장관께,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실항민과 귀환 난민에 대한 관심이 시급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실항문제와 관련된 포괄적 보고서인 『전쟁을 피하려다 절망을 만나다: 곤경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국내 실항민』(ASA 11/001/2012)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인 한국정부에, 상당수에 이르는 아프가니스탄 국내 실항민의 즉각적·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분쟁(혹은 자연재해)을 피해 고향을 떠난 수십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도시 슬럼 지역에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과 불안이 격화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제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수는 50 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곤경과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시급합니다. 슬럼 거주자들에게 옮겨줄 추위는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확인된 수만 41 명으로, 대부분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동맹국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내 실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원조 공여국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오는 7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게 될 공여국회의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실항민 원조 문제가 확실히 의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국내 실항민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이들을 “경제적 이주자”로 표현하며 다른 아프가니스탄의 빈곤층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실항민이 아닌 사람들 역시 매일같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실항민들의 고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살 곳을 찾아 다니며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동시에, 고향을 떠나게 만든 사건에 대한 끔찍한 기억과 힘겹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정부 정책은 정착촌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양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이로 인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때문에 인도주의 단체들의 우물파기 사업은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는 대신 트럭을 동원해 물을 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향민들이 살고 있는 캠프와 비공식 정착촌의 주거환경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진흙과 막대기, 합판, 비닐천, 판지로 만든 임시거처는 악천후를 피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장마철에 정착촌을 찾았을 당시, 이런 임시거처 내부에는 흙바닥에 빗물이 고여 질척거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실향민 가족들은 제대로 된 식량이나 연료, 물, 위생시설, 의료 서비스, 교육, 일자리를 거의 접하기 어려운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실향민들은 끊임없는 강제퇴거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미 강제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다시 집을 잃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퇴거가 적절한 절차상 보호 조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국내 실향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법률체계와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당 사안을 오는 7 월 도쿄에서 열리는 공여국회의의 의제로 제출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교통상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원조가 아프간 국내 실향민 및 귀환 난민에도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최우선적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작전이 실향민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진행하고, 군사작전지역에서 일어나는 실향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국내 실향민과 귀환 난민에게 시급히 필요한 주택, 식량, 물, 의료 서비스 등의 긴급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촉구해 주십시오.



- 국내 실향민과 귀환 난민이 아프가니스탄 국내 어디서든 신분증을 발급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촉구해 주십시오.
-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명확한 금지법을 제정·집행하고,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과 지침(U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Based Evictions and Displacement)에 따라 강제퇴거 지침을 채택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프가니스탄 국내 실향민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추가 정보 또한 기꺼이 제공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